

교육 평등화와 사회 평등화

김기석(서울대 교육학과)

해방 이후 약 반세기 동안 한국 교육은 다른 사회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급격한 교육 팽창이다. 60년대를 전후로 초등 교육은 완전 취학에 도달되었으며, 70년대 이후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이 급격하게 팽창되었다. 정부 수립 후 40년 동안 시행된 교육 정책의 변천을 기술한 「문교 40년사」는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 팽창을 “중등 교육의 보편화와 고등 교육의 대중화”로 요약하였다.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소위 “교육 혁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 확대이다. “어떻게 이러한 팽창이 가능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접어두면, 교육 관리들이 그간의 교육 팽창을 “모든 청소년을 위한 중등 교육의 꿈”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청소년에게 중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시점인 80년대 후반 이후는 그와 같은 장미 빛 꿈을 자랑한 시기이며, 동시에 해방 이후 한국 교육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 제기된 시기이다. 80년대 후반 교육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노정된 교육 논쟁은 한국 교육의 ‘위기’론이다. 한국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였다는 반성과 비판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로 한국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반성과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 ‘위기’론은 그동안 이루어진 공교육의 효과와 정통성에 대한 의구·우려·질책·비판으로 가득차 있다. 처음에는 현장 교사들의 자성과 비판으로 시작된 이 논의는 언론인·학부모·교육 전문가·교육

관료·정치인 등 교육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국민에게 자녀 교육은 문제 해결의 주요 방편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제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이 '위기'론의 진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논의의 주요 내용은 위기적 증세에 대한 염려·고발·비난으로 일관되었으나, 어느 경우에도 위기적 상황과 특히 그 원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별로 없었다. 다음, 입시 준비 중압감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의 고달픔과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위기적 상황의 증세를 찾았으나, 교육이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로조차 제기되지 않았다. "한국 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가, 또는 그 불평등을 완화하여 평등화에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 한국 교육이 난국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계를 풍미한 '위기'론에는 이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반드시 검토해 마땅하나 그동안 별로 다루지 않고 있었던 문제를 다룬 글이 조영달 교수의 글이다.

조영달 교수는 발표 논문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분배와 소득의 분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작업을 하였다. 먼저 교육을 통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상정하였다. 이 모형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이 주제를 다룬 국내외 연구 성과를 매우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이 주제를 보다 깊게 논의하기 위하여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조 교수는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지적은 교육학자는 물론 한국에서 사회과학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그것은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과 경제적 지위 획득 과정을 탐구하는 데 사용되는 안목과 방법론이 우리 사회와는 기본적인 틀을 달리한 서양 특히 미국에서 구안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학계의 연구 관행에 내

제한 ‘결함’을 지적한 점이다. 조 교수의 논지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규칙을 반영한 모형을 사용해야 교육을 통한 지위 획득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사회 이동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을 위시한 서양 사회의 사회 이동에서 주요 행위자는 개인이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포부 수준이 사회 이동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사회 이동의 단위나 동인은 가족이다.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있는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바 없어 외국의 틀을 대신할 한국 특유의 모형을 구안하지는 못했으나, 그동안의 연구는 부모의 요구와 지원으로 대변되는 가족의 요구와 지원이 의사 결정의 주요 단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려 과도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주요 이유는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기 때문이며, 학생 개인의 희망이 어떻든 남들만큼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 중산층의 경우 입시 전쟁의 ‘작전 참모’는 부모 특히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자녀 관리 능력이 학업 성취나 진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유능한 교사는 실력도 있어야 하나 부모처럼 ‘온정주의적’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교사이다. 부모의 ‘도리’와 ‘책임’에 따른 과도한 개입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결혼과 취업에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 특유의 행동 규칙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사회 이동 연구는 아직 없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 이동 연구가 대부분 한국인 특유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칙에 입각해 구안된 모형이 아니어서 경제적 지위 획득 과정이 다소 부정확하게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교육의 평등화와 사회의 평등화의 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을 왜곡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조 교수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대한 개관을 중심으로 이 교육의 평등화와 사회의 평등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조 교수가 개관한 국내 연구 결과는 다음과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다음 세 결론은 발표 논문의 순서와 일치되지 않으나, 토론자는 발표 논문의 논지를 좀더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요약하였다.

1) 교육 기회는 괄목할 만큼 확대되었으며, 특히 대학 교육의 기회는 유럽의 주요 선발 산업국가보다 더 확대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남녀, 사회 계층간에 고등 교육의 기회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요컨대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 분배에 여전히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국민 상당수가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 그리고 진학 단계에서 학업 성취 수준은 도시와 농촌, 남녀, 사회 계층별로 심한 격차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격차는 상급 학년이나 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지 않는다. 요컨대 학교 입학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각 수준별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학력 격차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 분배에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교육이 직업 지위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며, 특히 남녀·사회계층·노동시장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결손을 교육을 통해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 요인 이외의 요인인 지역·성·계층 요인이 소득 분배에서 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 교수가 개관한 기존 연구 결과는 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규정하고 교육 불평등이 다시 사회 불평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 교육은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도 형태는 다소 다르나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이 사회 평등화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실상 조금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불평등 재생산 기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 없이 귀속적 요인 특히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그 결과 사회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면, 현행 공교육은 그 존재 기반을 잃게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발표 논문에서 검토된 연구는 대부분 교육 기회나 사회적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현상을 한결같이 보고하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더 궁금한 문제, 즉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 기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침묵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 방법론적으로는 인과 분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론적으로는 한국 사회 특질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과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조 교수가 지적한 대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종단적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인과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인과 분석은 “누가 어디에 도달하는가?”뿐만 아니라 “누가 왜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는가?”를 답할 수 있다. 인과 분석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의 방향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특히 여러 수준의 학력 격차나 소득의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 탓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귀속적 요인 탓인지를 알 수 있다. 현존 사회 체제 아래서는 귀속적 요인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 요인에 따른 학력과 소득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서 교육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순한 교육 개혁만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광범위한 사회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도농간의 학력 격차나 대학 취학 기회의 격차도 그것이 어느 정도 개인의 귀속적 요인 탓이며 어느 정도 개인 능력 탓인지, 또는 학교 시설과 환경 탓인지 교사의 수준 탓인지 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투자 규모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방법론적 개선과 함께 한국 사회 특유 현상에 대한 성찰이 불평등 연구를 인도해야 한다. 사회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규정하고 이어 소득 분배를 왜곡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 교육의 특질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미 앞에서 한국 교육은 유례없는 팽창을 경험했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상 교육이다. 아직 중등 이상의 교육을 유상 교육 형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기에 교육 인구가 팽창하였고, 그에 따라 학력 상승이 이루어졌다. 유상 교육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학부모에 전가하는 소위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학교 설립과 운영 비용을 국가가 사립학교에 전가하는

사학 진흥 정책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유상 교육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교육이 학생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안의 일이며 부모의 '도리'의 문제라면, 교육비 지출 규모는 손익 계산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게 되고 그만큼 과다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현행 입시제도에서의 경쟁은 자신과의 경쟁이 아니라 남과의 경쟁이라면, 학부모는 남만큼 또는 그 이상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1985년 사교육비의 규모는 국가가 모든 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공교육비(반은 사부담임)보다 더 큰 것으로 추계되었다. 사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하면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정부 부담 교육비의 약 3배에 이른다. 학부모의 사부담 교육비는 모두 자녀의 학력(學力)과 학력(學歷)을 높이기 위해 지출된다. 이 처럼 학교 교육이 상품 시장의 일부로 포섭된 상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교육의 질(학업 성취)과 양(교육 연한)을 규정하게 되고, 다른 상품 시장에서 처럼 교육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된다.

교육을 통한 사회의 평등화는 합리적이며 동시에 매력적인 정책 과제이다. 교육의 평등화는 사회 평등화의 전제 조건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서 추구할 목표이다. 그런데 유상 교육은 교육 인구 팽창과 교육의 양적·질적 불평등을 동시에 초래하였다.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촉진하였다. 교육의 평등화와 사회의 평등화가 학구적 논의의 주제이며 동시에 실천적 과제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중등 및 고등 교육의 유상 교육을 무상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목표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 부담 공교육비를 훨씬 넘는 규모의 사교육비를 공공 부문으로 유도하여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평등화에 전제되는 교육의 평등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